

바이든 경제정책의 비판적 검토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요약 ■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건 계획과 노동, 통상 등 분야의 개혁 과제로 집약된다. 재건 계획은 불평등 해소, 탈탄소,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장기 목표 하에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서 미국경제의 성장경로를 끌어올리겠다는 지향을 담고 있다. 지난 40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적극적 평가가 있으나, 불평등 시정이나 탈탄소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불충분한 개혁 내용, 노동정책의 한계 등 비판도 제기된다. 아울러 정치적 기반인 중도파-좌파 연합의 잠재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책의 성공적 추진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기 침체 속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경제의 이중화가 진행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든 경제정책은 구조적인 임금 정체를 낳는 기존 정책 체제를 바꾸는 데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 필자의 견해는 본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를 맞이한 2020년 미국경제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3.4%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침체의 정도가 덜한 편이었다. GDP의 30%를 넘어선 재정투입 덕분이었다. 미국의 연방정부 순 지출(FYONET)은 제2차 대전 중 GDP의 40%까지 치솟았으나 전후 안정되어 1970년대 말부터는 GDP의 20%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 경제위기 전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GDP의 25%에 이른 기록만이 예외였다. 재정적자 비율도 추이가 유사했다. 1944년 GDP의 25%가 역사적 최고치였고 전후 줄곧 10%에 못 미쳤다. 2020년 15%는 전후 최고치였다.

올해 들어서는 백신접종 개시 이후 소비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도 개선되는 흐름이다. 5월부터는 총수요 압력을 보여주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의 장기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한편으로는 자산매입 축소(tapering)를 연내에 개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근접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상당 기간 2%를 상회할 때까지는 완화 기조를 지속한다는 통화정책 방향 하에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반면에 미국경제의 현 상황을, 과도한 재정투입에 따른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와 같은 인식 차이의 이면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경제정책에 대한 상이한 기대와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바이든 경제정책의 내용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는 대선 캠페인으로 '위대한 국가적 도전(great national challenges)'이라는 4대 비전을 발표했다. 그것은 인종 평등,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투자, 돌봄과 교육의 지원, 그리고 국내 제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공공조달과 대외 무역을 조정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전략이었다. 이들 비전의 실천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는 발전부문에

서 203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트럼프 집권 기간 중 법인과 부유층에 대해 이루어진 감세의 환원, 노동권 보호를 담은 PRO (promoting rights to organize) 법안의 통과, 유급 병가 및 유급 돌봄 휴가 보장, 연방 최저시급 15달러 등이 제시되었다. 바이든 경제정책은 이와 같은 비전과 공약을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의 계획과 통상, 노동 등 분야의 개혁 과제로 집약하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대담한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했다.

재건 계획은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 가족 계획(American Family Plan)의 세 법안으로 모습을 갖추었다. 이는 1930년대 뉴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부개입이자,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서 미국경제의 미래 성장경로 자체를 바꾸겠다는 지향을 담고 있었다. 불평등, 기후변화 및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이 재건 계획의 세 가지 장기 목표로 천명되었다.

구제 계획은 그 목적이 코로나 재난 지원이며 지난 3월 1.9조 달러 규모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공화당과의 합의를 거치며 감액되었고 선별성도 강화되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긴급예산법(CARES Act)보다 지원 규모는 늘었다. 인프라 계획은 노후 인프라 재건과 현대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탄소 저감과 돌봄 경제를 위한 투자가 핵심 내용이다. 3월에 2.2조 달러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현재 1.2조 달러로 감액되어 협상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계획은 사회안전망과 교육 분야 투자이며 4월에 1.7조 달러 계획이 제안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재건 계획의 재원조달을 위해 부유층과 법인에 대한 증세 방안을 수립했다. 인프라 계획은 15년에 걸친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것을 일부 되돌려 28%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가족 계획을 위해서는 10년에 걸쳐 개인소득세가 인상된다. 개인 연간 45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

른다. 재건 계획에 증세를 연계시킨 것은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미래에 정권 교체가 있을 때 필요한 지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 분야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개혁성을 가능하게 하는 갖대의 역할을 한다. 바이든 정부는 케네디 이후 처음으로 노동운동 출신 인사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고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노동자에 대해 15달러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동조 연대파업(secondary picketing)의 권리 회복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3월에 하원을 통과한 PRO 법안은 1980년대 이후 노조의 대표성과 단체결성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여 온 미국 노동 입법의 방향성을 바꾸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1930년대 뉴딜의 와그너 법 이후 가장 노동 친화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PRO 법안은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을 사용자가 해고 등으로 보복하는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플랫폼 노동의 확대에 발맞춰 노조 가입 자격을 확대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보는 규정도 폐지했다. 다만 상원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통상정책에서도 노동을 중시해 국제거래에 있어 인권 기준, 환경 기준, 노동 기준을 강화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대세를 이룬다. 작은 정부 실험의 종말과 재정정책의 귀환을 알리는 징후라는 평이 있다. 레이건 이후 약 40년간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적극적 해석도 시선을 끈다. 다소 성급해 보이지만 과거 뉴딜 질서로의 복귀조차 언급될 정도다. 국내 정책에서 공공투자 중심의 정부개입 확대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점은 분명 과거(민주당을 포함)와의 단절을 내포한다. 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적극성 역시 지난 오바마 정부와 차별적이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자국중심 보호무역주의를 계승한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는 트럼프의 통상정책 자체도 기존 전통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었다.

정치적 배경으로서의 중도파-좌파 연합

바이든 경제정책의 진취적인 측면은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일까? 그 하나의 답은 정치 연합에서 찾아진다. 민주당 주류는 2016년 클린턴 선거운동의 경험을 복기하면서 중도와 진보에 걸친 민주당 내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지지 기반 연합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치 연합을 위해 정책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준비 작업은 바이든-샌더스 통합대책위원회(Biden-Sanders unity task force)로 발전되었다.

동 위원회는 당내 경선을 마친 직후 2020년 4월에 결성되어 8월까지 활동했다. 6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해 중도파 대표와 좌파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 분과를 조직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분과는 중도파 존 케리와 좌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 신자유주의로부터의 단절적 요소가 포함된 포괄적인 경제정책 패키지는 그와 같은 분과 내 정책 조율을 거친 합의안의 형태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만들어진 합의안을 미국 인민과의 '새로운 계약'으로 선전했다. 대기업과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가치 지향을 담아냈다. 합의안은 바이든-해리스 선본에 제안되었고 상당 부분 대선 공약에 반영되었다. 집권 후에도 중도파-좌파 연합의 기초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트럼프 집권 기간을 거치면서 민주당 내 좌익 블록이 규모나 사회적 비중이 있어 괄목할 만큼 성장한 것이 한몫했다. 월가 점령 운동, 그린 뉴딜 운동,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 등은 정치의 새로운 영역을 열면서 좌파 세력의 진출을 도왔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시민들 사이에 연방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퇴조하고 적극적 사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것도 주효했다. 민주당 주류는 이와 같은 당 내외 환경 변화를 받아들여 당의 단결을 위해서는 좌익 블록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도파-좌파 연합이 추진되었다. 결과적

으로는 후보의 개인적 인기보다는 계획과 비전의 명확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지 기반 연합에서 대선 승리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요컨대 바이든 경제정책은 중도파 우위의 중도파-좌파 간 타협의 산물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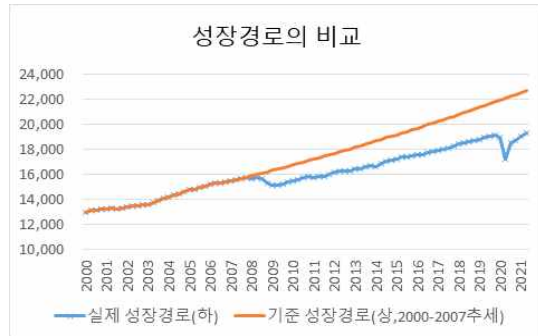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위험을 둘러싼 논란

바이든 경제정책에 대한 공화당과 산업계의 일차적인 비판은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 중요한 비판은 확장적 재정 운영을 지지해온 과거의 동지, 케인지언 경제학자들 내부로부터 나왔다. 구제 계획을 둘러싸고 새로운 인플레이션 매파가 출현했다. 오바마 정부 재무장관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와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샤는 1.9조 달러의 구제 계획은 규모가 너무 커 그간에 고정되어 있던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블랑샤는 2020년 4분기는 전년 동기보다 2.5%만큼 산출 수준이 낮았고 최근 미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7%이므로 2020년 4분기의 산출갭(실제 산출 수준이 완전고용 산출 수준으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개념)은 2.5%에 1.7%를 더해서 -4.2%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위기 직전인 2019년 미국 GDP(21.4조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21.4조에 4.2%를 곱한 0.9조 달러만큼 GDP가 완전고용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의미였다. 즉 0.9조 달러를 초과하는 재정투입은 경제를 완전고용을 넘어서 과열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블랑샤의 추정에는 의문점이 없지 않다. 블랑샤는 2019년 4분기가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같은 기간 설비가동률은 75% 정도였다. 거시경제가 중기적으로 완전고용 상태로 수렴한다는 관습적 전제가 틀렸다는 사실은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의 지수 추세를 연장한 성장경로를 기준으로 삼아 최근까지의 실제 성장경로와 비교한 다음의 <그림 1>을 보

면 쉽게 알 수 있다. GDP는 2019년 4분기에 기준 성장경로를 14%, 2020년 1분기에는 22%나 하회했다. 미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채 팬데믹의 충격을 맞았다고 볼 일이다.

<그림 1>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된 계기는 연초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사건이었다. 2021년 3월 31일 장기 금리는 1.74%까지 치솟았다. 이전 저점은 2020년 8월 4일의 0.52%였다. 둘 사이의 차이는 1.22%p였다. 같은 기간에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물가가 오르면 원금이나 이자를 그만큼 올려주므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는 국채)의 금리가 0.42%p 상승했으므로, 1.22%p에서 0.42%p를 차감한 0.8%p만큼은 기대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해석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 0.8%p에는 기대인플레이션 외에 물가연동국채의 유동성을 비롯한 다른 요인의 영향도 반영되어 있다. 그런 점을 따지면서 금리 상승분 1.22%p를 정확히 분해하면, 실질이자율 상승의 영향이 0.74%p이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의 영향은 0.22%p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중장기 시계에서 채권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별로 크지 않았던 셈이다. 요즘에는 거꾸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다. 연초에 장기 금리 급등이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면, 최근 장기 금리가 떨어졌으니 인플레이션 우려는 불식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경제지표에는 혼재된 신호가 담겨 있

다. 5월 이후 근원물가압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 저학력 유색인종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실업인구가 쌓여 있기도 하다. 전체 실업자의 40%에 달하는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가 팬데믹 이전보다 250만 명 이상 늘어난 상태이기도 하다. 여러 경제지표의 추이를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연준이나 재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재정투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기대인플레이션은 단기 시계에서만 확인되고 있고 통화정책 대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바이든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바이든 경제정책에 대한 다른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보다 공격적인 재정운동을 주문하는 입장이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시각에서는 지출 계획과 증세 계획의 연계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게 된다. 지출을 조세에 긴밀히 연계시키려고 의도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세입의 범위 내로 지출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기간에 성장률이 이자율을 웃도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저리로 차입을 확대하는 적자재정의 운영이 유리할 수 있다. 경제가 침체로부터 빠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긴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증세를 서두르기보다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최대한 확장 기조로 유지하면서 성장세가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15년간 증세한 재원을 8년간 지출하도록 한 현재의 계획이 문제가 없다면, 이를테면 왜 15년이 아니라 150년이나 300년, 3000년으로 나눠서 증세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오카시오-코르테즈와 선라이즈 운동 그룹, 루즈벨트 연구소, 레비경제학연구소 등도 탄소중립에 투입될 재원 규모가 불충분한 점을

비판한다. 탈탄소 목표를 위해서는 인프라 계획을 10조 달러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 케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와 같은 소극성은 기후변화 대응이 결국 대자본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민주당 주류가 버니 샌더스의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Medicare for all) 제안을 거부한 데 이어 연방 차원에서의 공공의료 체계 수립이나 의료 인력 총원 요구에 대해 방관하는 것 역시 자본의 수익성 원리에 대한 투항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포스트케인지언들은 또한 계획되고 있는 증세 정도로 불평등 시정의 결실을 볼 수 있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세계 개혁이 트럼프 이전으로의 부분적인 복귀에 불과한 탓이다. 실제로 법인세 최고 세율은 계획대로 인상되더라도 2017년 이전 수준에 못 미친다. 부자 감세 기조는 벗어난다고 하지만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 증세로 나아가지 않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노동정책을 둘러싼 문제제기 역시 치열하다. PRO 법안은 노동자를 플랫폼 업체의 지휘와 통제에서 자유롭고 실제 거래나 직업선택 과정에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경우에 독립 계약자로 간주하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법안이 설령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고용 관계에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단체행동권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수위가 시정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비록 협상 파트너인 공화당 때문일 수는 있으나, 연방 최저시급 15달러를 구제 계획 법안에서 민주당이 자진 삭제했다는 사실도 빼아프다. 최저시급 15달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주장이며 현재로서는 오히려 빈곤선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내각 인사 구성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든-샌더스 통합대책위원회 단계를 거쳐 실제 조각 과정에서는 좌파 인사의 비중이 줄었다. 노골적으로 친자본 제국주의 반노동 반환경 색채를 띤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존 케리는 오바마 정부 시절 시리아 개입을 주도했고 마이클 맥케이브는 대기업 듀폰의 자문역을 역임했으며 론 클레인은 월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이 있다.

중국 견제 명분으로 노골화되는 제국주의 경향도 우려를 낳는다. 바이든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중국과의 전면적 경쟁을 위한 것이어서 중국을 약화시키고 나면 다시 자본의 영향 하에 신자유주의로의 퇴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내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한 바이든 경제정책의 개혁성도 물거품이 되고 말 수 있다. 최근 쿠바 봉쇄나 대북 강경정책은 그와 같은 우려를 확대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중도파-좌파 연합의 잠재적 불안정성

바이든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기반이 안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짧은 연립정치 전통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형성된 중도파-좌파 연합이 향후 지속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없지 않다. 이 연합은 트럼프 정부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간 50대 50의 세력 균형 속에 양당의 당파성이 강화되고 좌파가 부상하는 것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세력 균형이 변하면 정치 연합의 지속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공화당에 우위를 내주게 되거나 반대로 민주당 내 중도파만으로도 공화당을 압도할 수 있게 된다면, 혹은 좌파 지지층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거나 반대로 뚜렷이 줄어들었다면, 중도파-좌파 연합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2022년 중간 선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류로서는 좌파와의 정치 연합이 지금까지는 중도개혁 세력의 집권과 비전 제

시를 가능케 한 동력이었지만 중간 선거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지지 기반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좌파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지만 좌파를 키우면 더 안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 향후 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중도파 주도로 공화당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는 특히 최저시급 등 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와 중도파 사이에 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대체로 일관되게 개혁 과제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고 국회의사당 난입으로 상징되는 극우 세력도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다. 어쩌면 개혁 입법의 좌초나 축소는 속명인지도 모른다. 민주당 주류로서는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바이든 경제정책이 가져온 변화는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 있어 그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후퇴하거나 역전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새로운 경제 질서의 출현을 거론하고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퇴조하는 조짐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장기 침체와 바이든 경제정책의 의의

마지막으로 바이든 경제정책은 좀 더 장기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해볼 필요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회복에 대한 경제학계의 한 가지 유력한 해석은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의 가설이다. 케인지언 계열 경제학자들 중에는 포스트케인지언인 토마스 펠리와 우파인 래리 서머스가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상당히 닳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장기 침체는 실제로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경제 내에 구조화된 경향이었다. 그 양상은 성장 정체, 임금 정체, 불평등, 양극화, 비정형 취약 노동자의 증가, 이중 구조의 심화, 중산층 붕괴 등으로 나타났다. 위대한 경제사가 피터 테민은 2017년 책 『The Vanishing Middle Class』에서 이런 현상을 두고 미국은 더 이상 하나의 나라가 아니며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서로 다른 자원과 기대, 잠재력을 가진 분열된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고 갈파한 바 있다.

포스트케인지언들은 특히 장기 침체에 있어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정책 체제 (policy regime)’의 장기적 효과를 강조한다. 1980년대의 거시경제정책 전환은 미국경제를 임금 상승이 구조적으로 정체된 경제로 탈바꿈시켰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로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서 복지국가도 위축되었다.

임금 정체는 부문별 고용 비중 변화와도 관련이 있었다. 제조업, 정보통신, 금융 등 고성장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자 밀려난 노동력은 깃 경제(gig economy, 필요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노동을 섭외하는 경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해갔다. 성장이 정체된 부문이 산업 예비군에 대한 최종 고용자 역할을 하면서 부문 간 임금 격차가 커졌고 총수요 제약도 강화되었다. 적어도 보물의 비용 질병(cost disease) 현상이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던 셈이다. 최근의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전환 역시 대자본의 이해에만 맡겨놓게 되면, 현재의 이중 구조와 수요 부진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커 보인다. 기술 전환은 고성장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를 촉진하기 쉬운데 그렇게 유리된 잉여 노동력은 다시 저성장 부문으로 몰려들어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거시경제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정책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부문 간 균형성장을 지원하고 저성장 부문의 시장 임금과 사회적 임금을 끌어올려 격차를 줄여가는 접근법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자본과 빅테크의 영향을 제한하는 노동 중심의 대항력 형성이 필수적이다. 장기 침체와 경제의 이중화라는 구조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혁 과제가 바로 그 방향으로 더욱 착목했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SIES**

| 약력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및 독일 베를린 국제정치경제연구소 방문교수를 역임했다.